

■ “노동조합 재정비리의 원인과 향후 과제”(김정한 연구위원)

- 현재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낮은 노조조직률(2003년말 기준 10.8%)과 기업규모별, 종사상지위별, 직종별 노노갈등으로 인한 영향력 약화 등 총체적 위기상황에 있음.
- 이러한 위기국면에서 노조재정비리가 이슈화되는 것은 노동조합이 더 이상 사회적 약자만은 아니며, 민주화와 조직운영의 투명화라는 사회적 추세를 외면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함.
- 재정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노조재정자료의 투명성 제고, 회계감사시스템의 실효성 도모, 감찰기구 설치, 노조재정자립방안 강구, 노조지도부의 재산공개 및 사전검증시스템의 도입 등이 필요함.

문의처 : 한국노동연구원 김정한 연구위원
Tel : 783-6083 E-mail : junghan@kli.re.kr

* 한국노동연구원 보도자료 및 원문은 인터넷(<http://www.kli.re.kr>)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.

노동조합 재정비리의 원인과 향후 과제

담 당 자	김정환 연구위원
전 화	02)782-9071

- 최근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음.
 - 조직률(피용자 기준)은 1989년 18.6%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3년 말 기준으로는 10.8%에 지나지 않음.
 - 또한 기업규모별, 종사상지위별, 직종별로도 노노갈등이 현재화되고 있어 노조의 대사회적 영향력이 점차 하락하고 있음.
- 노조의 힘이 저하되어 가는 가운데 발생한 이번 노조 재정비리는 노동운동에 치명타를 가한 중대사건임.
 - 노조재정비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회이슈화된 것은 노조도 더 이상 사회의 민주화와 운영의 투명화 추세를 역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며, 재정비리의 유형과 원인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.
- 노조재정비리의 유형
 - ① 조합비 유용비리 : 노조집행부가 조합비를 사용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비리로서 가장 전형적인 비리형태임.
 - ② 조합비 이외의 재정관련비리 : 주택기금이나 복지기금 등 조합비 이외의 각종 기금을 유용하는 비리형태임(택시노련 사례).
 - ③ 복지시설 운영관련 비리 : 노조가 소비조합, 복지회관, 자판기 등을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비리형태임.
 - ④ 회사와의 담합구조로 인한 비리 : 노조의 민주성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은 노조에서 조합원들의 불만을 억제하거나 노사분규를 회피하기 위해 검은 돈이나 특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리형태임.
 - ⑤ 권력형 비리 : 일부 노조간부가 자신의 특권을 악용하여 취업 등을 미끼로

금품을 수수하는 형태의 비리임

○ 노조재정비리의 원인

① 구조적 측면

- 노조재정의 미공개 및 투명성결여로 인한 비리와 회계감사시스템의 실효성 미확보로 인한 비리로서 노조 지배구조상의 문제로 인한 비리와 회사와의 담합구조로 인한 비리로 대별됨.

② 개인적 측면

- 노조를 치부나 사리사욕 달성의 수단으로 간주하여 일어남.

③ 자주성 측면

- 노조의 재정자립이 확보되지 않을 때, 재정비리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짐.

〈표〉 조합원규모별 노조간부의 출장비 조달방법

(단위 : 개소, %)

	노조예산에서 충당	회사에서 일부 보조	전적으로 회사 제공
50인 미만	51(78.5)	11(16.9)	3(4.6)
50~99인	69(79.3)	15(17.2)	3(3.5)
100~499인	216(72.5)	66(22.1)	16(5.4)
500~999인	49(74.2)	15(22.7)	2(3.0)
1,000인 이상	43(81.1)	9(17.0)	1(1.9)
전체	428(75.2)	116(20.4)	25(4.4)

자료 : 김정환(2002), 『합리적 노동운동을 위한 노동조합의 재정자립방안』, 『한국의 노사관계 발전방안 연구 II』, 노동부.

○ 노조재정비리 개선방안

- ① 정기적 회계감사 및 공개를 통한 노조재정자료의 투명성 제고
- ② 회계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회계감사시스템의 실효성 도모
- ③ 노조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자체 감찰기구 설치
- ④ 노조운영의 자주성 확보를 위한 노조재정자립방안 강구
- ⑤ 비리간부 제명 등을 포함하는 노조의 도덕성 회복운동 전개
- ⑥ 전국중앙조직, 대공장 등의 경우 재산공개 등 사전검증시스템 도입